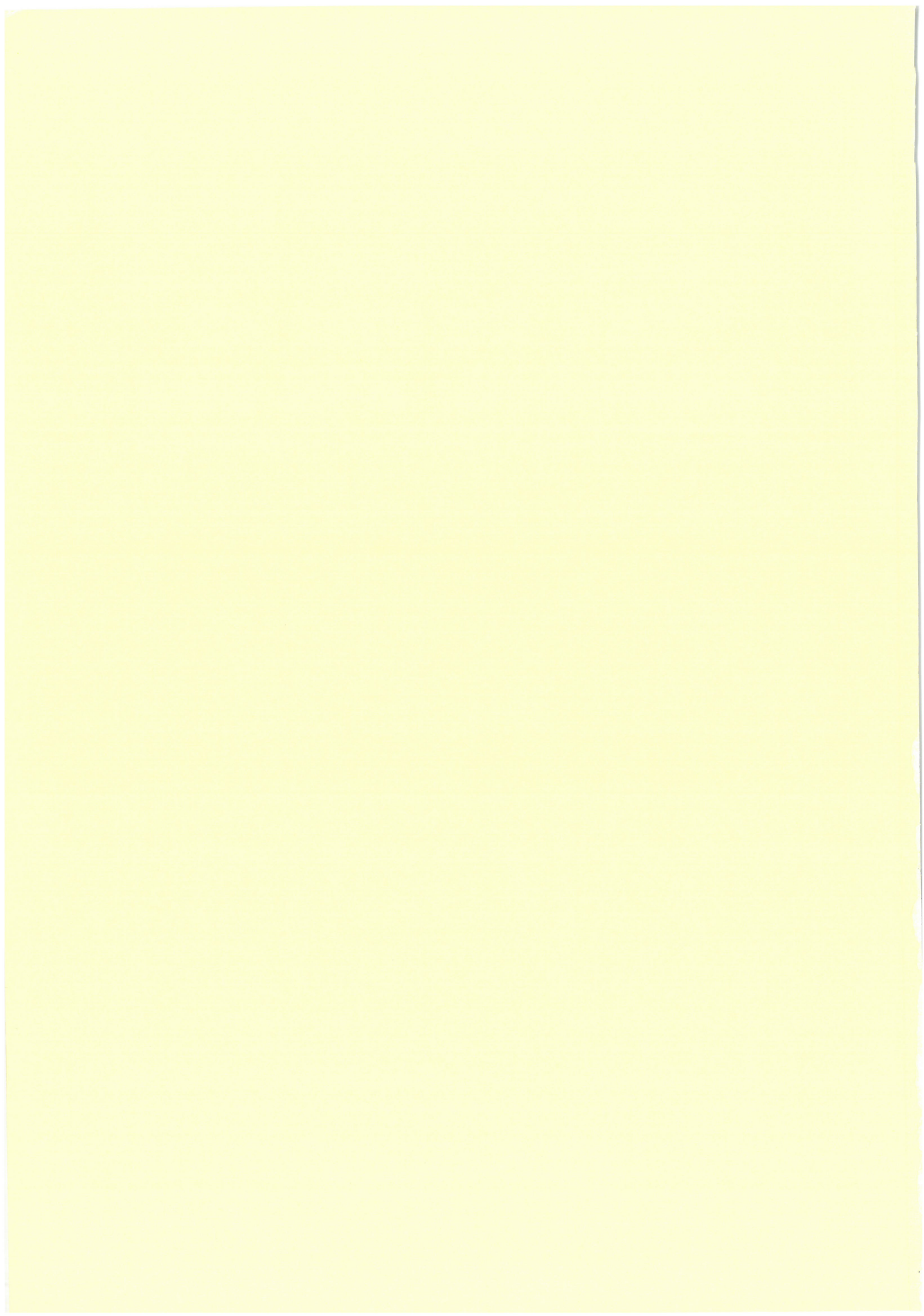

부정청구 없는 사회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권역별 설명회

2019. 12.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구 없는 사회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권역별 설명회

2019.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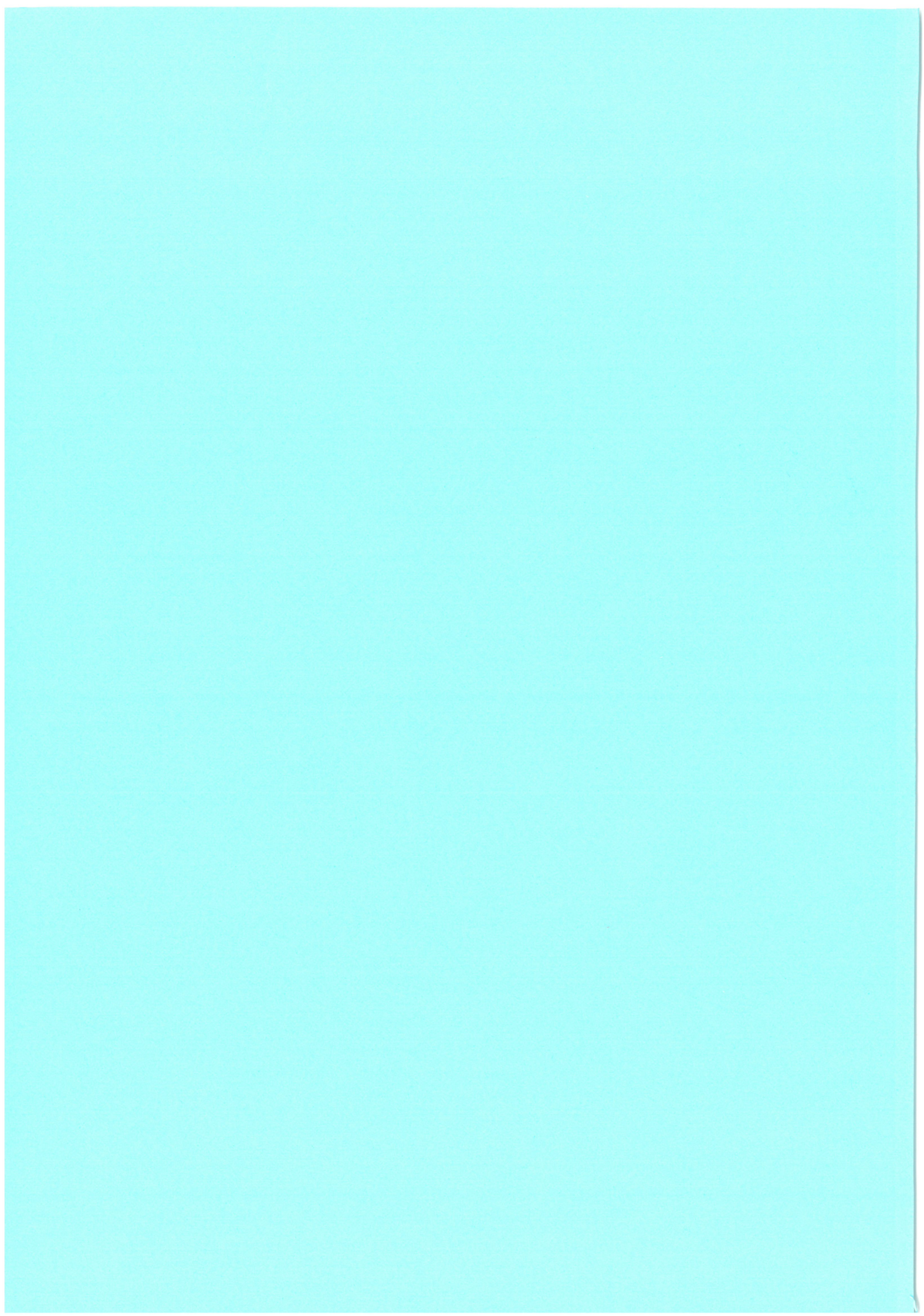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input type="checkbox"/> 공공재정환수법 설명자료	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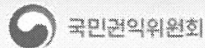
<input type="checkbox"/>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23
---	----

공공재정환수법 설명자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환수법 교육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 교육자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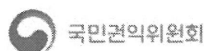
I 공공재정환수법 제정배경

II 공공재정환수법 제정의의

III 공공재정환수법 주요내용

공공재정자금금 |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IV 사례로 보는 공공재정환수법



국민권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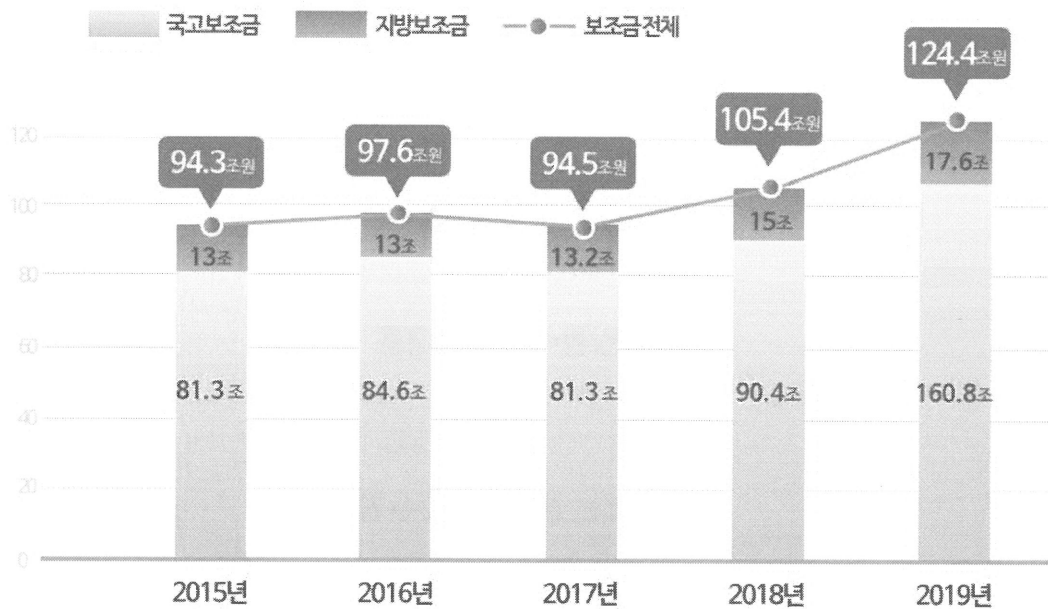
CHAPTER 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배경



공공재정환수법 제정배경



공공재정환수법 제정배경

“그러나, 공공재정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청구도 지속적으로 발생...”

MBC NEWS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 2차 점검서도 71건 적발

일정 '카드깡' 등의 수법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부터 지난 15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137곳을 합쳐
12곳에서 총 7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

적발 사례로는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서 결제한
경우와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
등으로 적발된 주유소들은 추가조사를 거쳐 양

주간동아

애 돌보라고 돈 줬더니, 원

유치원 지원금 왜?

유치원들의 정부 지원금 횡령이 사실로 드러났
공개한 2013~2017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총 5951건의 부정수급 및 비리가 적발됐습니
쓰거나, 명목 가변을 산 경우가 적었고, 가족
배달하는 지능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경기도 모유치원 원장인
물론, 상인용물까지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닌데 드러난 비리가 이 정도였던 거죠.

2016년 서울시교육청이 12개 사립유치원을 감
사실이 들었습니다. 같은 해 경기도 일선에서 사
정부 지원금 5억 원을 지체보조금, 자녀 용도 신
사실임과 동시에 정부 지원금 10여억 원을

연합뉴스

'농업 보조금은 눈먼 돈'...

축사 공사비 편취·사업비 과다계상

경남도, 농업분야 보조금 불법감사·91건 적발·15억 환수

경남도는 농업 분야 보조금 특장감사를 시행해 모두 91건에 걸쳐 15억3천여만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려고
창원·의령·창녕·하동·함천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업 분야 보조금 특장감사를 했다.

이번 감사는 최근 정부에서 생활 적폐 9대 과제 중 사익편취 유형의 생활적폐인 보조금
부정수급을 해감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도 보조금의 농업 분야는 인사와 예산에 관해서 자체에서 일하는 농업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분야에 국한하지 않았다.

경남도는 이번 특장감사를 통해 농업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환수된 금액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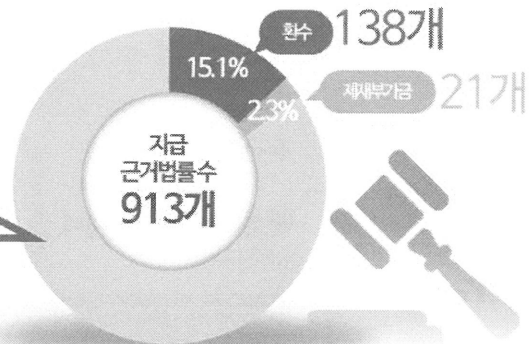
공공재정환수법 제정배경

부정청구 발생시,
개별법에 환수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근거가 있더라도
적용대상, 제재여부, 제재수준 등이 상이하여
재정누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

공공재정환수법 제정배경

현행법률(1,446개, '18.4월 기준) 전수조사시
환수근거가있는 법률은 138개(15.1%)에 불과

※ 공공재정 지급 근거 법률 913개,
환수 근거 법률 138개
제재부가금 유사규정 있는 법률 21개



부정청구에 대해 금전적 제재없이 환수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환수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부정이익을 반환받아야 함

공공재정환수법 제정배경

“ 재정누수 증가에도
행정청의 적극적 대응에 한계 ”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 제정으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CHAPTER 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의의



공공재정환수법 제정의의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이익의 환수 및
제재 강화



재정 누수의
사전 예방



CHAPTER 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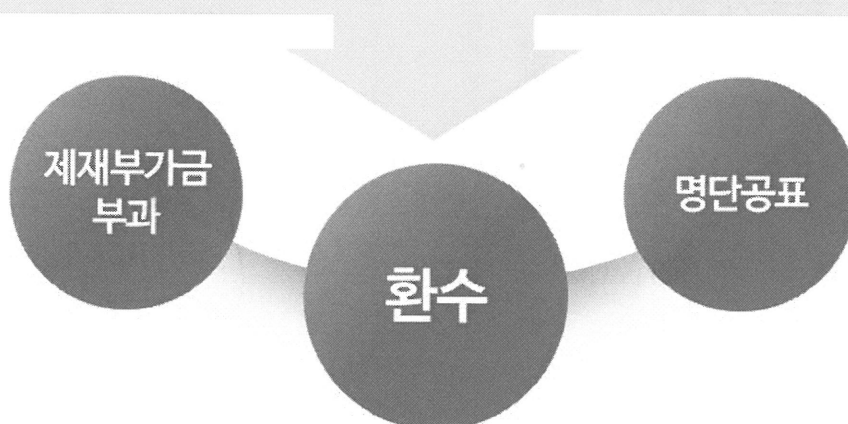
공공재정환수법 주요 내용



공공재정환수법 핵심내용

공공재정환수법은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일반법

공공재정에서 지급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 하면?



공공재정환수법 핵심내용


공공재정환수법은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일반법

누구든지 **부정청구 행위를 신고**하면?

“안전하게”
신고자 보호

“세상을 바꾸는 용기”
신고자 보상·포상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2020. 1. 1.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부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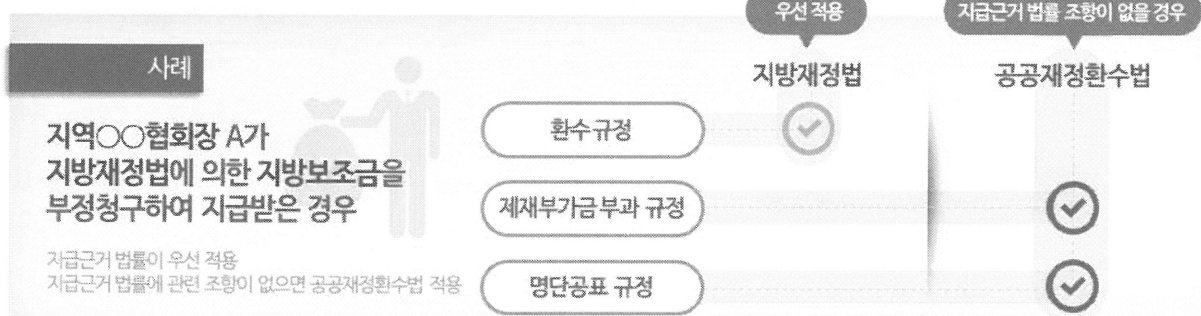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배제

- ☒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관세법」 등에 따른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 ☒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 ☒ 벌금·과료, 몰수·추징 및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사항과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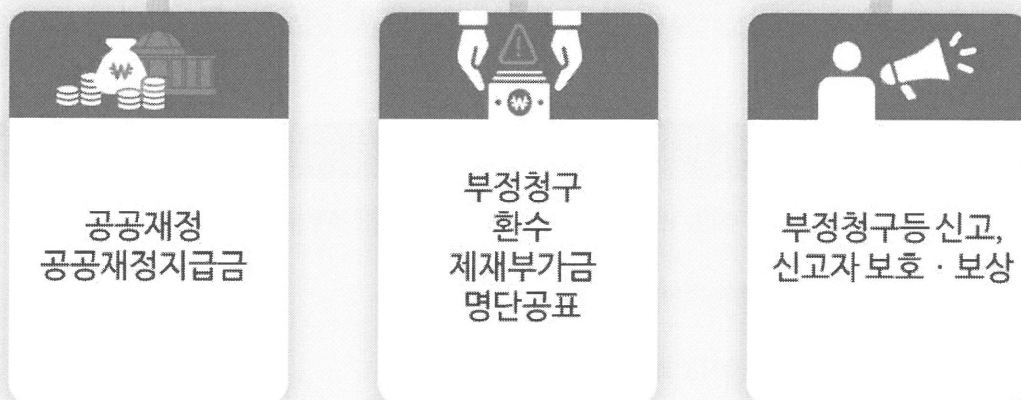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중단
- 부정이득의 환수
- 제재부가금 부과
- 가산금 및 체납처분
- 부정청구 등에 대한 조사
- 지급 중단, 환수, 제재부가금,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불복절차
- 명단공표
- 부정청구 신고에 대한 포상금

다른 법률
우선 적용



공공재정환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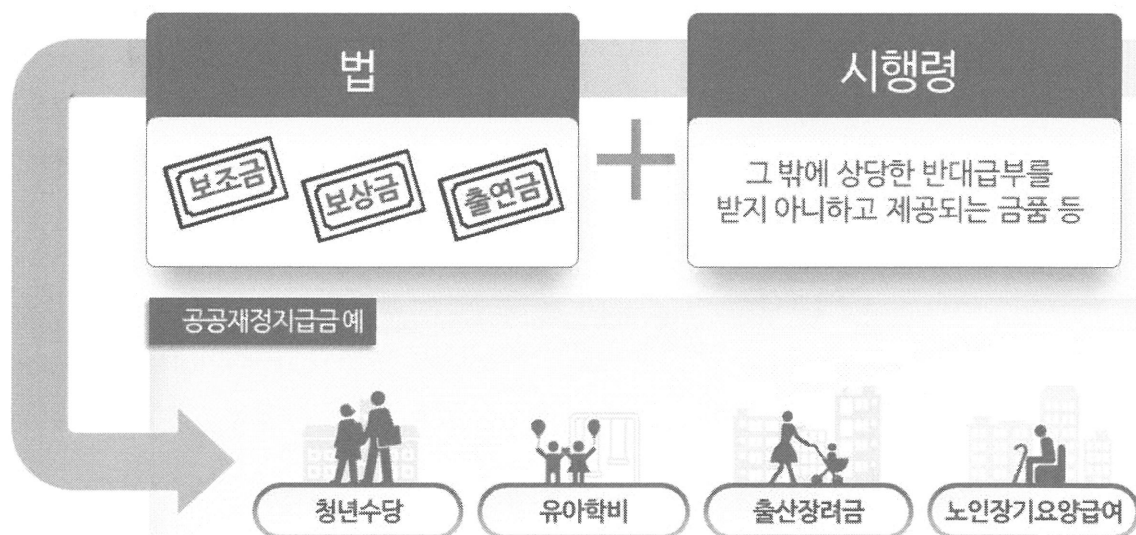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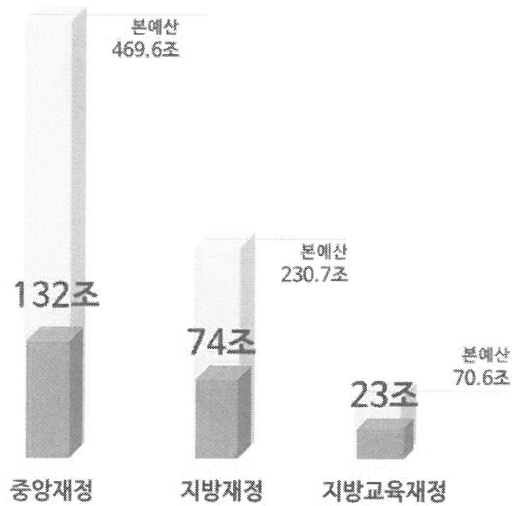
공공재정지급금?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공공재정지급금 추산 규모

법 적용대상 공공재정지급금 규모 추산



(국가재정) 중앙재정 132조,
지방재정 74조,
지방교육재정 23조

2019년 본예산 기준 약 229조 추산

※ 2019년 본예산 기준
국가재정 770.9조 중 29.7%에 해당
보조금법상 적용을 받는 국고보조금(77.8조) 포함

부정청구의 유형

부정 청구

법제2조 제6호

가목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목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다목 목적외 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라목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정청구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대상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

환수

행정청은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
(이자포함)

환수

행정청은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행정청?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행정권한을 보유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등

부정이익 환수
(이자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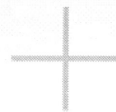
제재부가금 부과
(최대 5배)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

법익실효성 확보 장치

환수

환수



(지급중단)

확실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를 환수



환수하는 경우
공공재정지급금 지급결정 취소

불확실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중단

제재부가금 부과

제재부가금이란? *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부과

법 제9조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입법예고안)

허위청구	부정이익 가액의 $\times 5$
과다청구	부정이익 가액의 $\times 3$
목적외사용	부정이익 가액의 $\times 2$


시행령은
2020. 1. 1. 확정

제재부가금의 적용배제 사유(법 제11조)

01 환수금액(수회에 걸친 경우에는 누적된 금액)이 100만원 초과하지 않는 경우

0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03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 등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부가금의감면사유(법 제10조)

- 01 행정청 사전통지 전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는 경우

→ 제재부가금 면제



- 02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재부가금 감경·면제

- 03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제재부가금 감경·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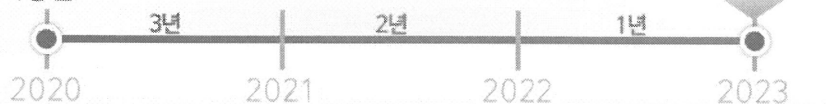
명단 공표

- 01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02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 ①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2회 이상
 - ② 부정이익 가액이 합계 3천만원 이상

예시 2023년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을 공표하려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년도





누구든지 부정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보호(신분보장)



누구든지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법 제19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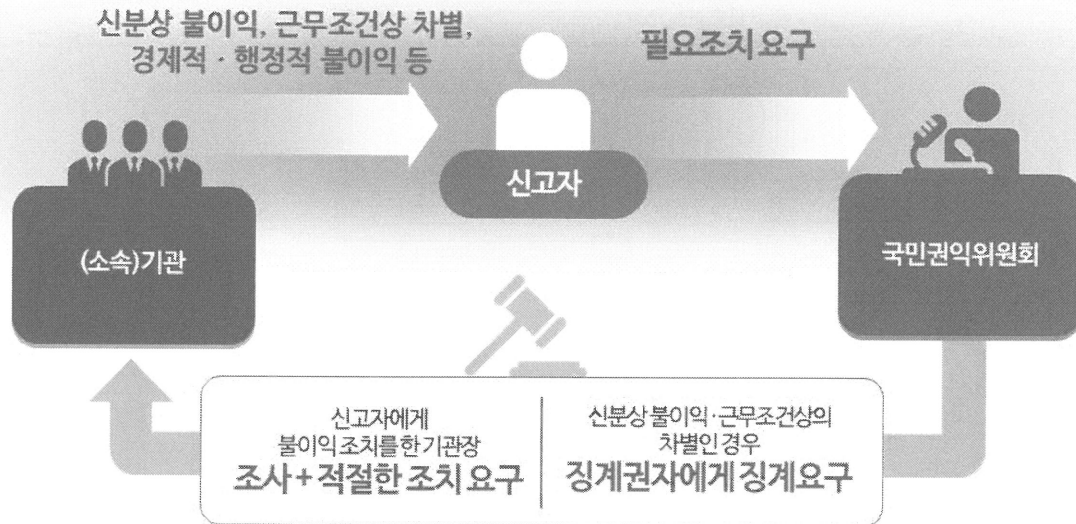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 징계보류 등 신분보장조치 요구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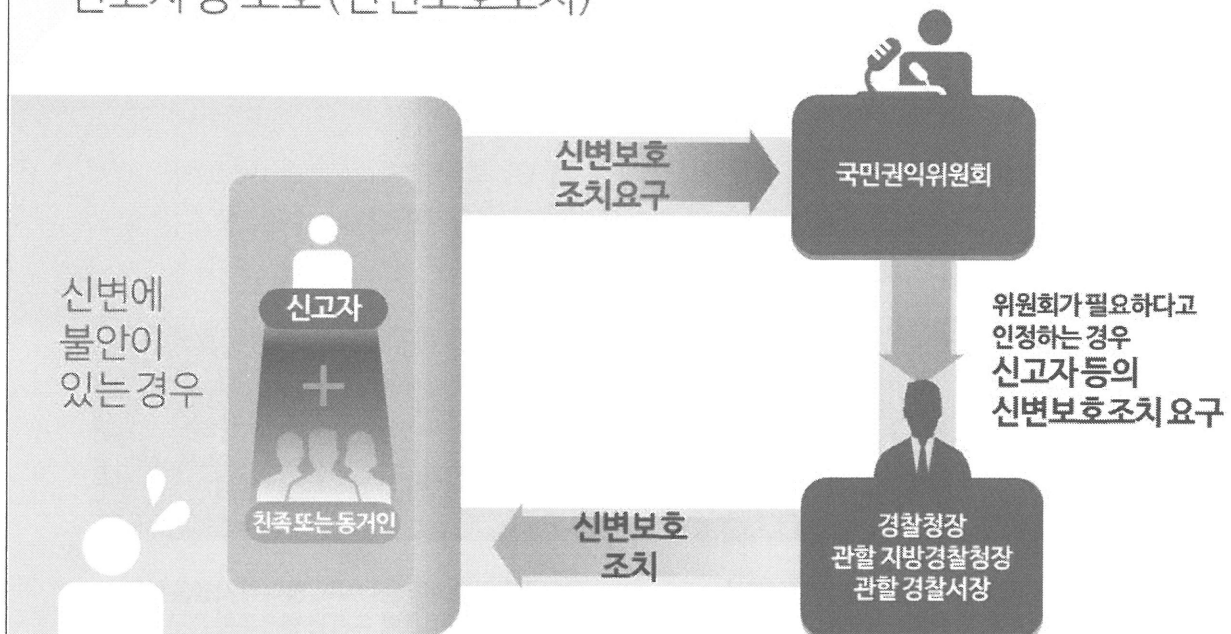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불이익 시정을 위한
인·허가의 잠정적효력유지등 필요조치 요구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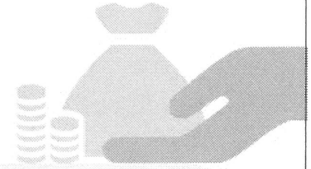
신고자보호(신분보장)



신고자등 보호(신변보호조치)



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지급



신고자의 부정청구등 신고로
부정이익 등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 가능

신고자의 부정청구등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 지급

벌칙 규정

- 부정청구 신고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청구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청구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관계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 등과 관련된 자에게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정청구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에 대해 조사를 하는 때에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 또는 조화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정청구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적절한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30조의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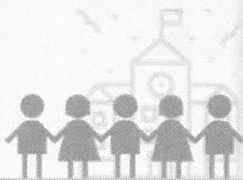
CHAPTER 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사례로 보는 공공재정환수법



사례 01 유아교육 보조금



유아교육기관의장 A
2017년



- 방과후수업을 실시하면서 원생 수를 실제 수업에 참여하는 인원보다 부풀려 청구
- 방과후 과정비 부정수급

유아교육기관의장 B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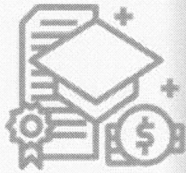


- 실제 운영하지 않은 서류상의 C반을 만들어 출석부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 자신의 자녀 D를 C반의 방과후 과정반 교수로 근무하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
- 방과후 과정비 부정수급

현재는 유아교육법에 의해 부정이의만 환수

부정청구로 2020년 이후
방과후 과정비 지급받은 경우 **제재부가금 추가 부과**

사례 02 국가장학금



대학생 A의 부모
2017년



-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A의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월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의 방법

•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

방학집중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근로장학생 B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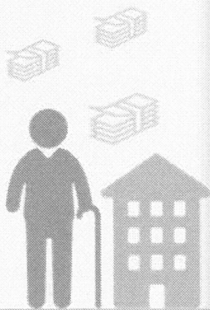
- 방학기간 동안 배우자 C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 (배우자 C는 근로장학생의 출결 및 근로시간 등을 관리하는 업무)

-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배우자 C의 도움을 받아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

• 국가교육근로장학금을 부정수급

부정청구로 2020년 이후
국가장학금 지급받은 경우
환수 및 제재부가금 추가 부과

사례 03 장기요양 급여비용



요양센터 대표 A
2018년



- 실제로는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으로 등록하고, 관련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

•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

현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부정이익만 환수

부정청구로 2020년 이후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받은 경우 제재부가금 추가 부과

사례 04 지방보조금

지역○○협회 회장 A
2019년



- ○○대회개최에 필요한용품 및 장비를 구입대여
- 거래업체들과 상호 공모하여 단가를 부풀린 허위의 견적서를 발급
- 보조금을 부정수급

○○학과 교수 B 등
2019년



- ○○대회를 개최하면서 필요한용품, 장비 등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여하였음에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하는 방법
- 보조금을 부정수급

현재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부정이익만 환수

부정청구로 2020년 이후
지방보조금 지급받은 경우 **제재부가금 추가 부과**